

JB Weekly Web Magazine

| 2026.03.11

“ Your Gateway to Global Trade ”



Contents

- 01 중동상황 피해 기업에 '세정지원' 결정...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p.1
- 02 중동 긴장 고조...해상보험 전쟁위험 특약 보험료 인상 움직임 p.2
- 03 수출입은행, 필리핀 원전 사업 금융 파트너로 나선다 p.3
- 04 EU 산업가속화법 추진...자동차·철강·배터리 업계 영향은 p.4
- 05 중기부,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 확대 p.6

1

중동상황 피해 기업에 '세정지원' 결정... 법인세 납부 3개월 연장

국세청,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및 납세담보 면제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피해 입은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를 연장하고 정유·항공 관계 기업의 세무조사는 보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3월 31일이었던 납부기한은 피해기업이 연장신청을 할 경우 3개월 연장된 6월 30일까지로 변경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승인된 기업의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늘어나 법인은 7월 31일, 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추가로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납세담보는 최대한 면제할 예정이다.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 홈택스(hometax.go.kr)에서 가능하며 관할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제출할 수 있으며 계약이나 발주가 취소되거나 선적의 지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또한 중동 전쟁으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 및 정유·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직권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2

중동 긴장 고조... 해상보험 전쟁위험 특약 보험료 인상 움직임

중동 군사적 충돌 우려...해상보험 시장 긴장

최근 중동 지역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포함한 중동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한 해상보험 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격화되면서 해당 항로의 안전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으며, 보험업계는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전쟁위험 특약(War Risk Premium)의 보험료 인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쟁위험 특약은 전쟁, 테러, 기뢰 등 군사적 충돌로 발생할 수 있는 선박과 화물 피해를 보장하는 특수 담보로, 일반 해상보험에서 제외되는 위험을 별도로 보장한다. 지정학적 위험이 높을 경우 보험료가 조정될 수 있어, 선주와 보험사 모두 관련 동향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항로를 운항하는 선박의 전쟁위험 담보 요율 조정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재보험사와 국내외 보험사들은 군사적 충돌 가능성과 항로 위험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신속하게 보험료를 조정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동 항로는 지정학적 요인에 따라 위험도가 급격히 변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전쟁위험 특약 보험료가 단기간에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중동 긴장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해운사들의 운항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며, 운송 계획과 비용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해상보험 시장에서 관련 리스크 모니터링이 강화되고, 요율 조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쟁위험 특약 보험료 인상은 항로 리스크를 반영한 정상적인 시장 조정"이라며 "운항 계획 수립과 보험 가입 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3 수출입은행, 필리핀 원전 사업 금융 파트너로 나선다

한수원·메탈코 협력 체결...K-원전 수주 위한 금융 지원 강화

한국수출입은행이 필리핀 원자력 발전 사업을 지원하는 핵심 금융 파트너로 나선다.

한국수출입은행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필리핀 최대 민간 전력기업 메탈코(Meralco)와 '필리핀 원전 사업 개발 협력을 위한 3자 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메탈코는 필리핀 전체 전력 소비량의 약 55%를 점유한 최대 전력 기업으로, 향후 필리핀 전력 인프라 사업 전반에 걸쳐 발주 영향력이 큰 핵심 기업으로 평가된다.

이번 협약은 이재명 대통령의 필리핀 국빈 방문을 계기로 'K-원전'의 현지 시장 선점을 금융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수출입은행은 메탈코가 추진하는 원전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한국 기업이 프로젝트에 참여할 경우 맞춤형 금융 패키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한수원의 원전 기술력과 메탈코의 현지 협력망을 결합해 필리핀 원전 산업 생태계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은 그동안 필리핀 에너지 시장에서 축적한 금융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협력에서도 핵심 금융 파트너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현재 수출입은행 자금으로 진행 중인 필리핀 원전 타당성 조사 사업은 향후 본격적인 원전 프로젝트 추진 시 한국 기업에 최적화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황기연 수출입은행장은 "이번 협약은 수출입은행의 금융 노하우가 필리핀 원전 분야로 확장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필리핀 원전 시장이 우리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금융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 EU 산업가속화법 추진...자동차·철강·배터리 업계 영향은

저탄소 기준·역내 생산 요건 강화

유럽연합(EU)이 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가속화법(Industrial Accelerator Act)'을 추진하면서 자동차·철강·배터리 등 국내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부는 3월 5일 자동차·철강·배터리 업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산업가속화법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업종별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EU 집행위는 3월 4일(현지시각) 역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가속화법 초안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공공조달 및 구매·소비 지원 제도에 저탄소 기준과 역내 생산 요건을 도입하고, 일부 전략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공공조달에 '저탄소·역내산' 기준 도입

법안에 따르면 철강, 알루미늄, 콘크리트 등 에너지집약 산업과 전기차·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수소차 등 자동차 산업 관련 제품에 대해 공공조달 참여 시 저탄소 및 역내산 요건이 적용된다.

역내산 여부는 EU 관세법상 원산지 규정에 따라 판단되며, EU와 FTA를 체결했거나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한 국가의 제품과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EU 역내산과 동등하게 간주된다. 다만 상호주의 위반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공공지원 제도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회원국이 구매·소비 지원 제도를 설계할 때 저탄소 기준과 역내 생산 요건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자동차 부문에서는 소형 무공해 차량에 대한 '슈퍼 크레딧' 인정 조건에 역내 조립 요건을 포함하는 방안도 담겼다.

전략 산업 투자에 외국인 규제 강화

산업가속화법은 외국인 투자 규제도 포함하고 있다. 배터리, 전기차 및 부품, 태양광, 핵심 원자재 등 신흥 전략 제조 분야에 대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제조 역량의 40%를 초과하는 제3국 투자자가 1억 유로 이상 투자할 경우 EU 당국의 승인 조건이 적용된다.

투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 인력의 50% 이상을 EU 노동자로 고용하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이와 함께 지분 제한, 합작투자 참여, 기술 이전 등 총 6개 조건 가운데 최소 4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EU와 무역협정이 적용되는 투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승인 조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4 EU 산업가속화법 추진...자동차·철강·배터리 업계 영향은

저탄소 기준·역내 생산 요건 강화

정부 "EU와 협의 통해 기업 영향 최소화"

산업부가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법안의 세부 요건이 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자동차 업계는 전기차 역내 조립 요건 강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철강 업계는 저탄소 철강의 구체적인 기준이 경쟁 환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향후 역내 조립 요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산업부는 이번 법안이 우리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세부 규정과 향후 입법 과정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5

중기부,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해외시장 동반진출 지원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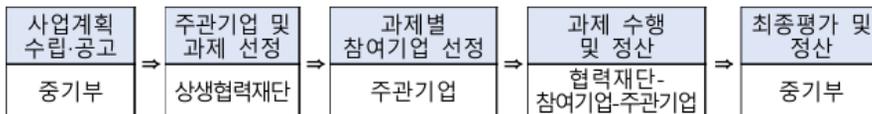
'2026대중소기업 동반진출사업' 통해 중소기업 지원 및 판로 개척

중소벤처기업부가 3월 4일까지 '2026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사업'의 일반·고도화 트랙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69억원을 지원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해외진출을 돕는다. 대기업의 글로벌 인프라를 이용해 혁신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을 원활히 해외로 진출시키기 위함이다.

중기부는 9일 '2026 대중소기업 동반진출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과 함께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대기업 등 산업 선도기업의 해외 인프라 및 네트워크를 활용해 역량은 있으나 자원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됐다.

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 등이 주관기업으로 참여해 협력 과제를 선정하면 중소기업은 자신의 역량에 맞는 과제에 지원해 협력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중기부에 의해 최종 평가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협력 과제는 크게 뷰티·방송·유통서비스 등의 소비재 분야와 금융·AI·물류 등을 포함하는 산업재 분야로 나뉜다. 올해부터는 기존 일대일 매칭 사업을 벗어나 유통이나 방송사 등 2개 이상의 주관기업이 하나의 중소기업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주관기업별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다. 중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중소기업당 지원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까지 늘어나며 과제별 총사업비의 60% 이내까지 지원된다. 생산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유형의 과제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참여 가능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되며 사업 신청 및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력재단 홈페이지 상생누리(www.winwinnuri.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